

역사 속의 혁명1)

최갑수 (서울대학교수, 서양사학)

정의와 개념

‘혁명’이란 원래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줄임말로써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을 말한다. 왕조의 교체는 천명(天命)을 혁신하는 행위라고 해서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통치자의 성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시대에 왕조의 교체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대개 ‘역성혁명’의 형태를 띠었던 반면에, 유럽에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문 편이었다. 예컨대 프랑스의 역사에서 메로빙거 왕조(481-751)가 카롤링거 왕조(751-987)로 바뀌는 것은 ‘역성혁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카롤링거 왕조에서 카페 왕조(987-1328), 발루아 왕조(1328-1589), 부르봉 왕조(1589-1792, 1814, 1815-1830)로 이어진 것은 같은 가문 안에서 직계의 혈통이 끊어지면서 방계가 그것을 계승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보자면 프랑스에서는 사실상 한 왕통이 1천년을 넘게 지속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동양과 유럽의 심원한 역사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특히 샤를마뉴 제국 시기(750-850년경)에 유럽적 차원의 지배계급이 형성되어 이후 1천년 가까이 지속할 수 있었던 특유의 역사적 조건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왕가의 존재를 국제적인 결속력을 가진 강력한 귀족집단이 보유했던 것인데, 이에 또 다른 유럽 차원의 제도인 기독교가 그것에 신성한 성격을 보태어 주었으니 국왕과 왕조에 대한 근왕주의는 유럽에서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이중적 안정장치를 가졌던 셈이다. 그러기에 단지 왕을 암살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나 프랑스혁명의 과정에서 대명천지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를 국왕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 것(각기 찰스1세와 루이16세를 1649년과 1793년에)은 유럽사의 맥락에서 보면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새로운 혁명의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혁명’이란 ‘역성혁명’이 아니라 근대적 의미의 혁명인 revolution의 번역어로서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뜻한다. 그러니까 동양 3국이 19세기 후반기에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revolution의 번역어로 새 한자어를 만들기보다는 기왕에 있었던 ‘혁명’을 차용했고, 그 결과 ‘혁명’의 의미에 변화가 생겨 전통적 의미와 함께 근대적 의미가 생겨났고 이후 전통적 의미를 압도하였다. 더욱이 혁명은 근대성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애초의 정치 영역에서 경제, 사회, 문화, 기타 삶의 모든 영역으로 용례가 확대, 적용되어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다소간 모호하지만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거와의 단절이 철저하기만 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예컨대 우익의 보수혁명이 역사적으로 가능하고, 파시즘을 혁명이념으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최근 파시즘이 매우 특수한 이데올로기적 역동성을 지녀 그것을 급진적 형태의 우익 혁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혁명은 근대적 의미를 획득한 프

1) 이 글은 원래 ‘혁명’이란 제목으로 최갑수 책임편집, 『역사용어사전』(서울대출판부 근간 예정)을 위해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랑스혁명기에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새 사회에 대한 전망이라는 의미를 함축하였다. 혁명이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현상이지만 모두 인간해방의 계기를 갖는다. 따라서 파시즘이란 우익 혁명이 아니라 반혁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의 기원과 역사적 변천

근대적 의미의 ‘혁명’은 유럽의 발명품이다. 이런 의미의 혁명은 서양의 고대에는 아예 없었고, 유럽의 중세나 근대초의 시기에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졌다. 단지 18세기 후반기에 미국 혁명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혁명’은 근본적이며 광범위한 변화를 함축하는 근대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실 유럽에서 이 용어가 생겨나고 그 용례가 바뀌어 가는 과정 자체가 유럽이 근대성을 이룩해가는 과정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용어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는 일은 곧 혁명의 계보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는 격렬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유럽 학술어의 원천인 고대 그리스어에는 ‘혁명’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흔히 플라톤이나 투키디데스의 번역본들이 *metabole politeias*(헌정 상의 변화)나 *stasis*(*στασις*)를 ‘혁명’으로 옮기지만, 전자는 정치적 주기변화의 예정된 순환을, 후자는 파당과 그것들 사이의 격렬한 충돌을 뜻할 뿐, 근본적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를 갖지 못했다. 고대 로마에서 혁명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적 주기변화의 순환을 뜻하는데 새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개입이나 능동성에 대한 감각조차도 결여했다. 이를테면 폴리비오스가 말했다는 ‘정치혁명(*politeion anakyklosis*)’이란 기실 국제(國制)가 변화하여 결국 맨 처음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주기적 과정, 곧 ‘정체 순환’을 뜻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추동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필연적이고 불가역적인 ‘운명’인 것이다. 키케로에게도 예컨대 카이사르에게 권력을 가져다준 ‘혁명’이란 자연적인 주기적 과정의 차원을 갖는 것이었다. 이렇듯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는 근대적인 의미의 혁명관이 부재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진보관이 결여된 결과였다.

서양 중세에 들어와서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더해 스토아주의와 신플라톤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세속사의 중요성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상의 나라들의 정치적 주기(탄생에서 멸망에 이르고 또 새 국가가 다시 탄생하는)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신의 뜻, 곧 ‘신국(神國)’이 실현되는 일직선적인 섭리사에 비해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혁명’(곧 복귀)은 인간사의 차원을 넘는 우주적 사건이었다. 실제로 ‘혁명’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 정치적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으니, 이를 매개한 것이 점성술이었다. ‘혁명’의 원어인 ‘*revolutio*’는 ‘복귀하다’, ‘제 상태로 돌아가다’란 의미를 갖는 ‘*revolvere*’에서 파생한 통속라틴어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영혼의 ‘윤회’라는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후에는 고정된 궤도를 가진 천체의 주기적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1543)가 대표적인 용례이며, 천문학적 용례는 17세기 후반기까지도 일반적이었다. 아울러 그것은 점성술의 신념을 반영하여, 천구의 회전은 인간사의 ‘혁명’(삶의 주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중세적 관념이 운명의 수레바퀴의 회전이라는 고대적 관념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계절의 순환이 중단 없는 시간의 흐름이면서 결국은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으로서 실제로는 아무런 실질적 변화를 야기하지 않듯이, 천체의 운행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의미의 ‘혁명’을 정치 현상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정체의 순환과 회귀를 뜻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 변화에 관한 천문학적 관념이 14-16세기에 ‘혁명’의 용례에서 지배적이었다. 1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에서 처음으로 ‘혁명’이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주기적 순환의 관점에서 격렬한 정치적 변화를 가리켰다. 따라서 이 용례에서 ‘혁명’이란 회복이자 복고요, 원래 상태로의 회귀를 뜻했다. 피렌체에서 1494년과 1527년에 메디치가가 권좌에서 밀려났을 때에 반메디치파는 그것을, 1512년에 메디치가가 복귀했을 때에 메디치파는 이것을 바로 ‘혁명’이라고 불렀다. 이런 용례는 이후에도 살아남아 예컨대 1593년에 프랑스 국왕 앙리4세가 칼뱅의 교리를 저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혁명’이라고 불렀다. 그는 운명의 수레바퀴의 어찌할 수 없는 회전에 몸을 맡긴 채 왕국을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켰다는 것이다.

흔히 17세기에 혁명의 근대적인 용례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는 유럽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17세기의 일반 위기’가 나타나 반란과 내전이 창궐했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에스파냐에 대한 네덜란드의 반란(1567-1648, 간헐적인 전쟁의 연속), 프롱드난(1648-53), 에스파냐의 영토에서 터져 나온 여러 반란들(예컨대 1640-59년의 카탈루냐 반란, 1640-68년의 포르투갈 반란, 기타 시칠리아 및 나폴리 반란 등), 잉글랜드의 지배에 대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저항(1608, 1639-40, 1641, 1642-47, 1648-51 등), 특히 1642-49년의 영국 내전 등. 사실 이것들의 대부분은 오늘날에도 반란이나 내전으로 간주되나, 1642-49년의 영국 내전은 흔히 ‘청교도혁명’이라고 하여 혁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것을 혁명으로 보는 것은 당시의 용례에 비춰 본다면 분명히 시대착오적이다. 당대인들은 그것을 ‘대반란(Great Rebellion)’으로 불렀거니와, 1640-60년과 심지어 1688년의 사건들에 대해 ‘혁명’이란 용어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1660년의 ‘왕정복고(Restoration)’라고 부르는 것을 ‘혁명’이라고 했다(클래런던 경 Lord Clarendon, 홉스 등). 왕당파만이 혁명의 전통적 개념에 젖어있었던 것은 아니다. 로크 등의 휘그파들 역시 우리가 1688년의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전통적 의미의 혁명으로 이해했다. 찰스2세와 특히 제임스2세가 왕국의 기본법을 무시했기에 1688년은 진정한 입헌군주제의 회복이요, 따라서 주기적 변화가 제자리로 복귀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혁명인 것이었다.

우리에게 친숙한 근대적인 혁명관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미국혁명(1774-83)과 프랑스혁명(1789-99)을 통해서였다. 두 혁명 모두 처음부터 혁명적 양상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식민지인들은 본국 정부의 탄압에 분노했지만, ‘대표 없는 과세 없다’는 주장이 말해주듯이 영국의 전통적인 입헌적 전통에 호소했고, 1789년 5월에 ‘삼부회’에 모였던 제3신분 대표들은 군주제의 전복을 피하기는커녕 근왕주의의 기치 아래 왕국의 쇄신을 꾀했다. 하지만 혁명의 과정 속에서 곧 혁명의 새로운 개념이 빚어졌다. 미국인들은 페인 Thomas Paine이 1776년 초에 『상식』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영국과의 분리 쪽으로 기울어 급기야 자연법과 이에 입각한 인간의 기본권에 근거하여 ‘독립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프랑스에서 ‘바스티유의 함락’은 절대주의를 타도한 ‘반란이 아닌 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두 혁명이 이룰 수 있었음은 인간이 집단적 노력을 통해 이승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몽사상의 믿음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두 혁명이 갖는 획기적인 세계사적 의의를 감지하고 또 표현한 최초의 인물 가운데 우리는 페인을 꼽을 수 있는데, 그는 두 혁명과정에 모두 참여한 최초의 국제혁명가였다. “이전에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은 인물의 교체나 지방적 환경의 변화 정도에 불과했다. 그것은 일상사와 마찬가지로 일어났다가는 사라졌으며, 그런 일의 발생이나 종말 속에는 그것이 일어난 지점 이외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

나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세계에서 보는 것은 사물의 자연 질서의 경신이며, 진리와 인간의 존재처럼 보편적인 원리체계이며, 정치적 행복 및 자연적 번영과 도덕과의 결합인 것이다.” “혁명의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바랄 수가 있는 것이다.”²⁾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프랑스혁명이 급진화하면서 혁명의 과격함에 놀라 점차 미국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켜 나갔고, 실제로 미국 헌법의 제정과정도 보여주듯이 보수적인 해석이 우세를 점하면서 오히려 두 혁명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이는 미국혁명가들조차 프랑스혁명이 갖는 획기적인 보편성을 무의식적으로나마 승인해왔음을 말해주며, 결과적으로 근대적인 혁명관을 창출했다는 영예를 프랑스혁명이 독차지하게 되었다. 흔히 프랑스의 혁명사학자들이 미국은 혁명 후에도 노예제를 유지한 반면에 프랑스는 1794년 초에 노예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했음을 근거로 하여 프랑스혁명의 보편성을 소리 높여 외쳐왔으나 노예제의 폐지가 영국과의 식민지 분쟁 및 노예반란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 나폴레옹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노예제를 회복시켰음을 고려한다면, 두 혁명의 차이가 생각보다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혁명과 변혁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혁명 초기부터 역사상 선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사태에 직면해 있음을 자각했다. 이들을 통해 혁명은 정치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근대적인 의미를 획득하였다. 헤겔은 프랑스혁명을 통해 혁명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곧 새 국가, 새 사회, 새 문명, 새 세계)을 창출하는 동시에 이것이 바로 인간적 활동의 결과물임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했던 인물이다. “태양이 창공에 자리 잡고 유성이 그 주위를 운행하게 된 지가 오래인데, 인간이 머리 위에, 즉 사상 위에서 사상에 의거해서 현실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인간은 이제 비로소 사상이 정신적 현실계를 지배해야 할 것임을 인식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숭고한 감격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정신의 열광은 마치 신적인 것과 세계의 실제적인 유화가 성취된 것처럼 세계를 전율시켰던 것이다.”³⁾

사실 혁명가들조차 혁명이 어떻게 해서 터져 나왔는지 잘 몰랐다. 무엇보다도 혁명이 야기한 변화가 체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소유권과 같은 훨씬 심원한 역사세계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혁명가들은 혁명의 급격한 사태변화에 압도되면서도 그것을 이끌어 사회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까지도 변화시키려고 했다. ‘인간이 집단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근대적 의미의 정치가 탄생한 것도 바로 프랑스혁명기였다.

이렇듯 변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계몽사상이 마련한 인간 이성과 진보에 대한 신뢰, 이를 뒷받침한 18세기 후반기의 서구의 경제적 발전, 이 새로운 움직임을 주도한 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등장 등이 기본적인 역사적 조건이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을 불가역적인 과정으로 만든 직접적인 요인은 정치무대에 이제껏 소외되어왔던 민중이 대거 가담했던 새로운 역사적 현실이다.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이 지적했듯이 “귀족이 혁명을 시작하고, 평민이 그것을 성취하였다.” 수백만 명의 남녀가 혁명을 위해, 아니면 혁명에 맞서 직간접으로 개입하였고, 그 결과 미증유의 현실이 나타났다. 변화가 정상상태가 된 것이다. 변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 보수주의자들조차 이 새로운 현실을

2) 토머스 페인, 『인권론』, 이가형 역, 세계사상교양전집, 후기 제5권 (을유문화사, 1966), 274, 276쪽.

3) 헤겔, 『역사철학강의』 (김종호 역, 삼성출판사, 1990), 482쪽.

외면할 수 없었다.

사실 프랑스혁명 이전에 보수주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기존질서(status quo)’를 넘어설 수 있는 전망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고, 그러기에 ‘혁명’이란 언제나 원상태로의 복귀로 귀착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을 통해 불가역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이 되면서 이제 기존 질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기득권집단에게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고, 이들조차도 변화의 논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사실 이 새로운 현실인 변화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두의 생사가 걸린 관심사가 되었고, 근대세계의 3대 이데올로기인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바로 프랑스혁명의 와중에서 탄생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프랑스혁명은 ‘혁명’의 근대적 의미를 빚어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혁명의 고전적인 양태를 확립했다. 프랑스혁명은 근대정치사회질서의 원리를 비할 데 없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민중층의 동원으로 그 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어, 모든 혁명의 ‘원형’이자 ‘전범(典範)’이 되었다. 프랑스혁명의 과정에서 이 혁명을 넘어서는 새 혁명의 기획, 곧 변혁에의 전망이 탄생했던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혁명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확립시킨 근대혁명인 동시에,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소유권의 폐지를 이룩해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혁명전략과 변혁운동의 본모습을 보여준 ‘영구혁명’의 준거가 되었다. 인간(들)은 사회를 선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상적 원리에 따라 근본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다는 해방의 원리를 프랑스혁명이 체현했던 것이다.

입헌혁명론

프랑스혁명은 불과 10년 사이에 프랑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혁명의 충격을 파급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나폴레옹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프랑스혁명에 이끌렸던 것은 단지 그것이 인간해방의 계기를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장에 유럽에서 프랑스혁명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것이 부국강병의 지름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혁명은 영국과의 오랜 식민지 쟁탈의 경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국가개혁의 차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분제의 폐지가 활기찬 시민사회를 만들어내어 강력한 국가의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바꿔 말하면 인간해방과 부국강병은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의 세계사는 특정 국가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혁명의 기획이라는 점에서 인간해방과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별개의 계보를 이룬다. 흔히 전자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으로, 후자는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불린다. 후자의 경우 통상 기존체제의 위기를 ‘개혁’을 통해 극복하는 길이 차단되면, 지배층의 일부가 나서서 폭력을 구사하면서까지 기존권력에 대해 부국강병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의 채택을 강요하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사회세력을 동원하여 ‘밑으로부터의 혁명’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유럽만이 아니라 비유럽세계에서도 헌법의 제정은 부국강병을 위한 관건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미국혁명과 특히 프랑스혁명의 성과를 인식한 결과인데, 독립혁명이 성공한 뒤에 연방헌법을 제정한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혁명은 제3신분 대표들의 별도 회합(1789년 5월 6일), 국민의회 성립(6월 17일), 헌법 제정 임무 자임(‘테니스 코트의 선언’과 제헌의회)의 성립, 6월 20일), 헌법의 전문으로 ‘인권선언’ 채택(8월 26일), 헌법 제정 완료(1791년 9월 3일), 국왕의 승인(9월 13일)과 선

서(9월 14일), 제헌의회의 해산(9월 30일)과 입법의회 구성(10월 1일) 등을 순차적으로 전개하여 '입헌혁명론'의 본보기가 되었다.

입헌혁명론은 러시아혁명이 발발할 때까지 1세기 간 지배적인 혁명 이데올로기로서 구실을 했다. 지배층이 스스로 나서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예가 없지 않다. 신분해방이 17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예속농민으로부터 자유농과 토지없는 노동자층을 만들어낸 덴마크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나폴레옹에게 패배한 직후에 행해진 '프로이센 개혁'(1807-15), 독일의 통일과 이에 입각하여 비스마르크가 추진한 1870년대의 성공한 '위로부터의 독일혁명', 비유럽세계에서는 드물게도 일본의 '메이지유신'(1868-89)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것들은 예외 없이 부국강병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지배층의 강화를 꾀했는데, 최소한 입헌체제의 수립(형식에 그치지 않음이었지만)이라는 양보를 요구하게 마련이어서 기존 군주제나 지배층으로 보자면 쉽게 개혁에 나서기 어렵게 했다. 서구에서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이 나타난 이래 유럽만이 아니라 비유럽세계 역시 적어도 19세기 후반부터 개혁을 위한 긴박한 대내외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기존체제가 자기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종종 혁명이 터져 나왔고 이 경우에 그것은 입헌혁명의 성격을 띠기 십상이었다. 계몽된 중산층이 혁명의 주도세력이 되기도 했고, 비유럽세계에서는 지배층의 다른 분파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7월혁명과 벨기에혁명(1830), 프랑스의 2월혁명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지에서의 혁명들(1848-51)은 전자에 속하고, 러시아혁명(1905), 이란혁명(1906), 오스만혁명(1908년), 멕시코혁명(1910년), 중국신해혁명(1911년) 등은 후자에 속한다. 전자의 경우 노동자들이 혁명에 동원되기도 했으나 부르주아지와 연대하지 않는 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의 가담에 놀라 수구세력에 투항하곤 하여 혁명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후자는 일견 전자와는 다른 혁명계보에 속한다. 구미열강이 19세기 마지막 4분기에 전 지구의 대부분을 식민화하는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적 자존 여부가 비유럽세계의 모든 정치계급에게 핵심적인 사안이 되었고, 혁명이 터져 나온 위의 다섯 지역은 그래도 제국적 전통과 규모를 지녀 근대국가체제 속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존을 모색하였다.

중요하게도 이 다섯 혁명의 주도세력은 모두 프랑스혁명의 초기 국면을 본보기로 하는 입헌혁명론을 지녔고, 이것이 상당 정도 혁명의 양상과 전개과정을 규정했다. 사실 혁명이란, 특히 대혁명일수록 인간(들)의 통제력 너머의 세계에 속한다. 그러니까 변혁이 '피하는 것'이라면 혁명은 그야말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혁명의 주도세력이 가진 혁명관은 혁명의 진행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프랑스혁명 이후 '긴 19세기'의 모든 혁명에서 혁명가들은 초기에 일단 승세를 타게 되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커녕 기성권력(대개는 기존의 군주)과 타협하여 헌법의 제정을 당면 목표로 내세웠다. 입헌혁명이라고 하여 혁명이 이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서 프랑스혁명은 결국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중혁명에 이르기기도 했지만 19세기의 모든 혁명은 입헌체제의 수립이라는 제한된 목표를 가졌고, 이런 목표를 기존 체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새로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혁명적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예컨대 오스만제국의 1908년의 '청년 튀르크 혁명'의 경우 무력으로 군주제를 장악할 수 있음에도 '입헌혁명'의 스케줄에 따라 혁명을 그 단계에서 그쳤다. 결국 청년 튀르크당은 술탄 압둘하미드2세를 쫓아냈지만 국가권력의 전복을 피하기는커녕 '1876년의 헌법'을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했다.⁴⁾

4) Nader Sohrabi, "Historicizing Revolutions: Constitutional Revolutions in the Ottoman Empire, Iran, and Russia, 1905-19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1995, pp. 1383-1447; "Global Waves, Local Actors: What the Young Turks Knew about Other

사회혁명론

러시아혁명 이후라고 하여 입헌혁명론의 설득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일 혁명(1918-1923)에서 주도세력인 사민당과 독립사민당은 입헌혁명론을 고수했고 노동자 병사 평의회 역시 제헌의회 선거 실시가 주요한 요구사항의 하나였다. 하지만 러시아혁명 이후 정치적 기획의 '전 지구적 상상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러시아혁명(1917)의 성공이 혁명의 '세계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제 혁명의 직접적인 목표가 혁명을 일으켜 기존 권력으로부터 헌법의 제정의 약속을 얻어내는 것 - 물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권력을 무너뜨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무릅쓰고라도 - 에서 기존 국가권력의 탈취로 바뀌었다. 이런 점은 예컨대 중국공산당의 창설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대조(李大釗)가 1917-18년간에 보여준 모델 혁명의 전환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1917년만 하더라도 여전히 입헌혁명론의 신봉자였는데, 10월혁명이 성공하면서 1918년 7월에 이르러 「법아혁명지비교관(法俄革命之比較觀)」에서 양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비교하면서 러시아혁명의 사회주의혁명론으로 귀착하였다. “러시아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을 대함에 우리는 다만 머리를 들어 세계 신문명의 서광을 맞고, 귀를 기울여 자유와 인도주의 위에 세워진 새로운 러시아의 소식을 들어야 하며, 세계의 새로운 흐름에 우리 스스로 적응해 나가야만 한다.”⁵⁾

사회혁명론은 러시아혁명의 성공으로 특히 비유럽세계에서 20세기의 혁명론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미 19세기에 사회주의 이론가들을 통해 다듬어졌다. 이들 역시 프랑스혁명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입헌혁명의 면모가 아니라 인간해방의 계기였고, 프랑스혁명의 초기가 아니라 민중혁명기와 바뵈프(Babeuf)의 '평등주의자의 음모'였다. 특히 마르크스는 사회혁명론의 체계화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그는 인간해방의 역사에서 프랑스혁명이 갖는 획기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울러 그 성과가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즉 프랑스혁명은 신분제 폐지를 통해 만민의 자유를 회복시켰지만 그것을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의 토대 위에 놓아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는커녕 오히려 계급사회를 빚어내는데 그쳤다. 그리하여 프랑스혁명은 그 주도세력인 부르주아지를 해방시켜 새 지배계급으로 만든 반면에 노동 대중을 오히려 자본주의 착취의 대상인 무산 프롤레타리아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프랑스혁명의 뒤를 이어 전 인민의 해방을 위한 새 혁명이 필요하며, 이는 사적 소유권을 철폐하고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을 실현할 사회주의 혁명 또는 공산혁명이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라는 과도기를 거쳐 공산주의의 최종적 국면에 이르면 국가는 계급지배도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여 소멸할 것이었다.

사실 마르크스의 혁명론은 생각보다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무정부주의자들, 산업화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했던 온갖 경향의 사회개혁가들 모두의 사회적 열망을 반영했고, 동시에 기조(François Guizot)와 같은 프랑스 왕정복고기의 자유주의 역사가들의 연구 성과에 입각했다. 그의 강점은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행동강령을 갖춘 체계적인 혁명론으로 빚어내는 한편, 그것에 거시적인 역사적 전망을 부여하여 추종자들에게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그는 역사발전이 생산양식이 계기적으로 지양되는 방식

Revolutions and Why It Mattered",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44, 2002, pp. 45-79; "Revolution as Pathways to Modernity", Julia Adams et al. ed. *Remaking Modern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5, pp. 300-329.

5) 최갑수,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 비교와 상관성」, 『프랑스사연구』 제18집 (2008년 2월), 89-119쪽.

으로 일어나며, 그 원동력이 새로운 생산력과 이를 제약하는 낡은 생산관계의 충돌, 이를 반영하는 구질서 내의 계급갈등 및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역사 구성에서 볼 때, 혁명은 그 최고심급에서 한 생산양식에서 다음 생산양식으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일종의 지각변동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프랑스혁명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결정적 계기가 되며, 새 사회의 주인공인 부르주아지가 봉건세력을 물리치고 권좌를 차지한 ‘부르주아혁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혁명관이 새로운 사회혁명에 대한 호교론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이행하듯이 자본주의 역시 사회/공산주의로 이행하게 마련이며 앞선 이행의 결정적인 계기가 부르주아혁명이라면 이제 새로운 이행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역사적 필연이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혁명론이 사회혁명론을 지배하게 된 것은 그 과학성에 있는데, 19세기 후반기에 전 지구적으로 행해진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이를 보증했다. 또한 그는 1871년의 파리코뮌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최초의 본보기로 치켜세웠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입헌혁명의 모델에서 벗어나 국가 자체의 전복을 꾀한 최초의 혁명이었다. 부르주아지는 적대계급인 특권계급과 같은 유산자이기에 부르주아혁명은 입헌혁명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프롤레타리아는 무산자로서 기존 자본주의 사회에 아무런 연고권이 없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권력의 전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의미심장하게도 19세기 말에 이르면 사회혁명을 위한 국제조직이 만들어지면서 프랑스혁명의 상징인 삼색기와 ‘라마르세예즈’가 새 혁명의 상징인 적기(赤旗)와 ‘인터내셔널가’로 바뀌었다.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사회혁명론의 성가를 높였고, 그것은 특히 비유럽세계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애초 마르크스는 서구와 같은 선진 산업사회에서 사회혁명이 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다른 많은 비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80-90%가 농민이고 중산층 역시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미약했다. 그러나 페트로그라드와 같은 대도시에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도로 조직되고 정치적으로 의식수준이 매우 높은 프롤레타리아가 존재했다. 또한 러시아 역시 입헌혁명 내지 부르주아혁명을 성취하지 못해 입헌체제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조건의 유사성으로 러시아혁명은 새 혁명 이데올로기의 교과서가 되었고, 그 저자는 레닌과 트로츠키였다.

새 혁명론은 프롤레타리아의 지도 아래 노동자와 농민의 유대를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정당, 곧 볼셰비키였지만, 적어도 소비에트 체제 초기에 당의 지배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부르주아혁명조차 성취하지 못한 여건에서 과연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러시아 혁명가들 사이에서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지지자는 소수였으나, 레닌은 1917년의 ‘4월테제’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 동맹에 입각한 2단계 혁명론을 전면 수정하여 러시아혁명을 부르주아혁명의 단계로부터 곧장 사회주의혁명으로 발전시켜 전환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다. 사실 단계적 혁명론과 영구혁명론의 문제는 혁명의 주체세력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혁명의 국제적 전망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신생 소비에트 정권은 기대했던 유럽의 혁명이 불발로 그치면서 국제적 고립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지난한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러시아혁명이 새로운 본보기 혁명이 되기는 했지만 러시아와 제3세계의 지역적 차이로 혁명론에 수정이 생겨났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민의 비중이 압도적인 제3세계에서 농민의 혁명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었다. 중국의 마오쩌둥, 베트남의 보 구엔 지압, 쿠바의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등은 농촌과 농민조직에 주목했고 농민의 지지를 받아 필요할 경우에는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다른 제3세계 혁명가들에게 새로운 전범이 되었다. 20세기,

특히 후반기의 혁명들은 사실상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반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을 지녀 사회주의적인 수사(修辭)와 형식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민족혁명의 면모를 지녔다. 유럽 열강의 상대적 약화와 미국과 소련에 의한 냉전체제의 성립은 제3세계의 일련의 민족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들에 일정한 사회혁명적 외양을 부여해 주었다.

혁명의 역사학

프랑스혁명으로 혁명이 근대적 의미를 획득하면서 이미 혁명기부터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프랑스혁명과 유사한 면모를 지녔거나 비교할만한 사건들에 혁명이라는 용어가 소급 적용되었다. 예컨대 라파예트 후작은 자신이 참전한 바 있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1789년의 프랑스인들의 영웅적 행위에 비견할 만 하다고 보아 그것을 곧 ‘미국혁명’이라고 불렀고, 기조는 1820년대에 영국의 내전을 근대적인 의미의 혁명이라고 부른 최초의 역사가이다. 네덜란드의 역사가들도 곧 이어 16세기의 ‘네덜란드 반란’을 ‘네덜란드 혁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인식의 변화가 역사적 사건의 성격 규정에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이런 개칭은 비유럽세계의 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이를테면 ‘동학란’이 ‘동학혁명’이나 ‘동학농민전쟁’이 되었고, 당대에 ‘란(亂)’으로 폄하된 적지 않은 사건들이 혁명의 지위를 새로이 부여받았다. 혁명이 주요한 근대적 현상이 되면서 그 용례는 더욱 확대되어 정치적 사건을 넘어 광범위한 현상에 거의 무차별적으로 붙여졌다. 1820년대부터 영국의 ‘산업혁명’을 운위하기 시작했고, ‘바로크혁명’, ‘과학혁명’, ‘신석기혁명’, ‘농업혁명’ 등 급격한 획기적 변화를 지칭하기 위해 ‘혁명’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두루 동원되었고, 심지어는 로마공화정이 원수정으로 변한 것을 ‘로마혁명’으로 부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진지한 역사가가 범하기도 했다.

엄격한 의미의 혁명에 국한한다면, 19세기에는 대체적으로 휘그해석이 우세했다. 이 시기에는 구미의 각국에서 전문적인 근대역사학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사료편찬작업을 시작하면서 시대정신에 부합되게 혁명을 자유를 향한 거대한 진전으로 묘사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주로 1688년의 ‘ 명예혁명’을 영국혁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의회가 입헌군주제와 법의 지배를 확립하여 자유를 확대시켜가는 오랜 역사적 과정의 최종 단계로 파악했다. 미국혁명 역시 “영국의 폭정에 맞선 자유를 위한 움직임”으로 간주되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 사가들 역시 프랑스혁명을 같은 시각에서 해석했고 따라서 민중의 정치개입이 나타나고 폭력이 빈발한 공포정치기는 혁명의 성과로부터 배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런 혁명들은 대개 각국에서 진정한 근대의 시발을 알리는 것이어서 국민적 정체성의 핵심적인 일부를 이루었고,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기 십상이었던 만큼 단지 학술적 토론에 그치지 않고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예컨대 프랑스혁명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현실규정력이 워낙 커서 적어도 제3공화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1880년대까지는 ‘과학적 연구’가 쉽지 않았다. 어디에서나 보수진영에서는 혁명의 발발을 특정 소수집단의 ‘음모’로 보는 해석이 우세했고, 사회주의 해석도 제기되었다.

근대역사학이 쇄신을 겪어 사회경제사가 현대역사학의 주류가 되면서 위의 여러 혁명들을 ‘부르주아혁명’으로 이해하는 새 혁명해석이 학계에 도입되고 혁명연구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부르주아혁명관은 애초 사회혁명론의 일환으로 운동권에서 제기되었으나 특히 러시아혁명의 성공 이후 유럽사회의 자기전망이 변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학계의 주도적인 해석으로 자리 잡고 적어도 1960년대 말까지 혁명의 ‘고전’해석의 위치를 차지했다. 이제 여러 나라의 유능한 역사가들이 마르크스 역사관과 방법론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면밀한 사료작업을 통해

혁명의 주도세력, 계급투쟁, 민중층과 농민층, 강령, 자본주의 발전과의 관계, 구체제와 새 국가의 성격, 폭력, 혁명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뛰어난 성과들을 제시하여 참으로 현대역사학의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특히 프랑سخ계는 혁명연구를 특화시켜 프랑سخ혁명을 기본적으로 부르주아혁명으로 파악하면서도 귀족반란, 농민혁명, 민중혁명이라는 부차적인 움직임의 존재를 확인하여 비할 데 없이 풍성한 혁명의 전체사를 그려냈다.

프랑سخ계가 이룩한 프랑سخ혁명의 고전해석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프랑سخ혁명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장기적인 변화를 종결시킨 결정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통해 부르주아들은 마침내 정치권력을 장악했고 부르주아 국가를 건설하고 지배계급에 올랐다. ② 부르주아지는 혁명을 주도했지만 도시와 농촌의 민중층의 지지와 지원이 없었다면 절대군주와 귀족의 저항을 분쇄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르주아들의 양보는 불가피했고 그 결과 부르주아혁명 내부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민중혁명과 농민혁명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프랑سخ혁명은 어떤 단일한 관점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복잡성과 중층성을 갖는다. ③ 그렇기에 프랑سخ혁명은 부르주아혁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을 아울러 가질 수 있었다. 민중혁명은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열었고, 혁명적 경험 속에서 일부의 혁명가는 소유제의 폐지라는 관념에 이를 수 있었다. ④ ‘공포정치’는 혁명의 불가분의 일부분 이라기보다는 대내외적인 반혁명에 직면한 결과 나타난,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부르주아혁명관은 태생적 문제점을 지녔다. 이것은 애초 19세기 전반기에 프랑스 자유주의 역사가들이 프랑سخ혁명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역사적 개념이었는데, 마르크스는 그것에 세계사적 위상을 부여하여 그것을 분석적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에게 부르주아혁명이란 개별 혁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사건들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프랑سخ혁명, 미국혁명, 영국혁명만이 아니라 이것들과는 매우 다른 역사적 위상을 갖는 1524-25년의 독일 농민전쟁도 부르주아혁명으로 보았고, 이 연장선상에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1848년의 실패한 독일 3월혁명, 1860년대의 이탈리아 통일운동, 바이마르 공화국을 설정한 1918년의 독일혁명, 1905년의 러시아혁명, 심지어 1917년의 2월혁명 등을 한데 묶어 부르주아혁명으로 이해하였다. 더욱이 마르크스는 역사발전관과 사회혁명론을 웅장한 규모로 결합시켜 부르주아혁명에 애초 주어져지 않았던 자본주의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부르주아지는 자본가와 동일시 되었는데, 이는 영국사에 프랑سخ혁명을 투사한 셈이었다.

이렇듯 부르주아혁명은 분석적 개념이기에 개별 혁명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한때 1688년의 명예혁명만이 아니라 1640년대의 내전까지 영국혁명으로 포괄하여 그것을 부르주아혁명으로 보려는 혁명해석이 진지하게 제기되었으나, 오늘날 영국학계는 이를 거의 전적으로 부정한다. 자유주의의 경향이 매우 강한 미국의 학계에서도 1910-20년대에 미국혁명을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는 꽤 진보적인 견해(Progressive School)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후 집중 공격을 받아 거의 와해된 상태이다. 부르주아혁명의 주인공인 프랑سخ혁명에 대해서조차 1970년대 이후 ‘수정주의’라는 이름 아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적어도 프랑سخ 학계에서 프랑سخ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을 부정하는 이들은 소수에 속하지만, 혁명 부르주아지가 자본가적 속성을 갖는다는 고전해석에 대한 영국과 미국 학계의 문제제기는 설득력을 갖는다.

오늘날 혁명의 역사학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1968년 5월혁명 이후 근본적 변화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고 특히 1989-91년에 ‘동구혁명’을 통해 ‘현실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부르주아혁명론의 역사적 근거가 약화되었다. 이런 추세변화는 ‘계몽사상의 기획’에 대한 구미

지성계의 자기반성과 ‘포스트 징후군’이라는 새로운 지적 흐름으로 번져 역사학 내부에서 사회·경제사가 후퇴하고 새로운 정치사와 문화사가 득세하였다. 현대역사학을 떠받치던 전체사적 전망이 포기되고 계급적 분석에 입각한 역사에 대한 사회적 해석은 거의 포기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부르주아혁명관은 개별 혁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각론(各論) 수준에서는 프랑스혁명을 제외하고는 진지한 입론의 노력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 유럽사 내지 세계사라는 총론(總論)의 수준에서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혁명의 역사학에서 ‘수정주의’가 대안적 역사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판적’ 차원에 그쳤음을 말해준다.

반혁명의 혁명학

혁명연구의 또 다른 전통으로는 미국의 사회과학계가 추진해온 ‘사회과학적 혁명사’ 내지 ‘혁명의 비교사’를 들 수 있다. 이 혁명연구 역시 4세대에 걸치는 꽤 오랜 역사적 계보를 갖는다. 먼저 출발점으로서 1920-30년대의 ‘혁명의 자연사’가 있다. 브린튼(Crane Brinton)의 『혁명의 해부』(1938)가 대표적이다. 예측력을 가진 법칙을 발견하기보다는 프랑스혁명을 전범으로 삼아 혁명의 ‘정률(定律; uniformities)’을 발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분석대상은 이른바 ‘대혁명’에 국한했고, ‘혁명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에 그쳤다.

1950-60년대의 ‘정치폭력의 일반이론’을 혁명연구의 제2세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존슨(Chalmers Johnson),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거(Robert Gurr)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근대화론에 입각한 장기적인 사회변화의 모델을 가졌고, 이런 점에서 ‘혁명의 근대화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연구들의 목표는 혁명의 이해가 아니라 오히려 혁명의 방지 내지 차단이었고, 여기에 미국의 국방성은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했다. 사회과학의 반혁명적 속성이 실체적 근거를 갖는 이유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른바 엄격한 의미의 혁명만이 아니라 쿠데타, 반란, 봉기 등 정부의 비합법적 전복과 집단적 폭력 등 모든 정치폭력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연구의 동기가 이렇기에 혁명의 결과보다는 혁명적 전복 자체와 그것에 이은 혼란과 불안정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당시 미국학계의 주류 방법론인 행태주의 이론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고, ‘대규모 부정수(不定數; large-N)’ 통계작업에 근거한 연역적 추론이 정교한 방식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여, 혁명에 관한 일반이론의 구축은 물론 혁명에 대한 이해에도 제대로 이를 수 없었다.

1970-8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제대로 된 ‘혁명학’이 처음 출현하는데, ‘혁명의 사회구조론’이 그것이다. 사실 새 혁명해석의 등장엔 무어(Barrington Moore, Jr.)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여전히 전범의 구실을 하고 있지만, 스카치폴(Theoda Skocpol)의 『국가와 사회혁명』(1979)이 나온 뒤에야 ‘사회구조론’은 미국에서 혁명연구의 주류해석의 위치를 차지했다. 이것은 비교사적 분석과 계급이론에 입각한 사회구조분석을 결합시켰는데, 혁명의 역사적 이행에 대한 사회과학의 공헌이자 역사사회학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혁명학은 ‘제4세대’를 운위할 만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구혁명’의 발발과 충격이 큰 작용을 하였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구세대의 골드스톤(Jack A. Goldstone)과 킬리, 신세대의 포란(John Foran)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혁명에 대한 사회구조분석을 확대, 심화시키는 한편, 혁명이론과 사회운동론의 결합을 추구한다. 특히 과거의 혁명학과는 달리 ‘정치적 안정’을 문제항으로 설정하여 혁명을, 그런 안정을 유지해주는 조건들이 무너지는 결과로 파악하여 혁명연구의 새 차원을 개척하고 있다.

혁명의 시대의 종언?

1989-91년에 동구혁명이 터져 나왔다. 나라에 따라 혁명의 양상과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지녔다. 먼저 동구혁명은 러시아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유일한 혁명이다. 그것은 고전적인 혁명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했다: 급속하고 광범위한 사회변동을 낳았다, 중앙정부의 비효율적인 개혁 시도에 민중봉기가 결합하였다, 지식인의 중요한 역할, 사회질서의 전반적인 와해시점에서 혁명이 발생했다 등. 아울러 다음과 같은 면모들을 가지지 못했다: 징벌적인 폭력, 계급적 성격,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 건설적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에의 신뢰, 숙청에 대한 구 권력집단의 저항 등.

동구혁명이 발생했을 때에 많은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이 탈공산주의혁명이 20세기 사회혁명론의 본고장인 소련의 핵심적인 내부로부터 마련되어 그것 자체를 해소시켜 '현실 사회주의'를 역사적으로 붕괴시켰다는 점이다. 혁명을 진보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원동력의 하나로 본다면, 이는 분명 역설적인 상황이었다.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제 러시아혁명은 호소력을 상실했고 역사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봉인하는 듯 했다. 역사에 더 이상 진보가 있을 수 없으며, 그렇다면 혁명의 시대도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왕정복고기의 역사가들의 혁명관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더욱 역설적인 것은 동구혁명의 많은 추진자들이 러시아혁명을 넘어 프랑스혁명에서 '인권혁명'의 본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프랑스혁명 200돌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7월 14일에 전 세계로부터 파리에 모였던 많은 혁명사학자들이 수정해석에 기대어 근본적인 변화에의 전망을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프랑스혁명은 돌연 동유럽에서 새로운 추종자를 찾아낸 것인가?

적어도 구미의 세계서 혁명의 시대는 끝난 듯 보인다. 그렇다면 근대사회를 이룩한 곳에서는 더 이상 혁명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인가? 결국 혁명은 근대세계의 계기이자, 그 구성요소요, 그 반영인가? 이에 답하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제한적이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중첩되어 있는 비유럽세계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근대성의 진원지인 유럽에서조차 자본주의의 모순은 근본적이다. 혁명연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혁명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변혁은 피하는 것이지만 혁명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민석홍 편, 『프랑스혁명사론』 (까치, 1988)
- 장 마생,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양희영 옮김, 교양인, 2005)
- 배링턴 무어,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진덕규 옮김, 까치, 1985)
- 페테 벤데 편, 『혁명의 역사』 (권세훈 옮김, 시아출판사, 2004)
- 크레인 브린튼, 『혁명의 해부』 (차기벽 옮김, 문명사, 1982)
- 테다 스카치폴, 『국가와 사회혁명』 (한창수 외 옮김, 까치, 1981)
- 에드먼드 윌슨, 『핀란드역으로』 (유강은 옮김, 이매진, 2007)
- C. L. R. 제임스, 『블랙 자코뱅』 (우태정 옮김, 필맥, 2007)
- 데이비드 파커 외, 『혁명의 탄생』 (박윤덕 옮김, 교양인, 2009)
- 찰스 킬리, 『유럽혁명 1492-1992』 (윤승준 옮김, 새물결, 2000)